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후 기부 유도

정세균 총리 절충안 마련
자발적 기부 통한 환수안 부상
민주, 기부금 세액공제 제안
여야 합의 관건…野는 부정적

민주당 최고위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휴가를 떠난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박주민 최고위원(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일단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뒤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찾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며 당정간 조율을 거친 방안이라고 설명했고, 정 총리는 조 정책위의장의 발표 이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뜻을 전달해 홍 부총리도 수용하기로 했고, 청와대와도 조율했다"고 말해, 당정청이 사실상 합의한 안(案)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전국민 지급에 강하게 반대해 온 홍 부총리와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해 당정간 이견의 '불씨'는 남아있다. 정 총리 주도로 당정이 이견을 해소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기재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의사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 총리가 중재한 이번 절충안으로 사실상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보고 야당과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민주당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이번 절충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되, 고소득층 등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재벌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등 고소득층 지원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 세금을 통한 환수처럼 '줬다가 빼앗을' 경우 살 수 있는 반발도 피하는 방식이다. 기부반납 참여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참여폭이 커질수록 재정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전 사회적으로 '자발적 반납'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애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재정만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당정 절충안에 부정적이다. 당정 절충안대로 국민의 자발적 반납을 통해 일부 재정을 다시 채워넣더라도 당장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3조원가량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경선 '물밑 조율' 분주

당권·국회의장 셈법 복잡
이번주 계파간 교통정리
초선 표심잡기 최대 관건

180석의 '슈퍼여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 자리를 두고 22일 출마 의사자들의 '물밑 조율'이 분주한 분위기다.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을 가리지 않고 여러 주자가 거론되는 가운데, 출마 의사를 굳힌 의원도 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여전히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다음달 7일 원내대표 경선일까지는 보름이 남았다. 당내에서는 이번주 내 계파와 친분관계 등을 고려한 교통 정리가 끝나고 다음주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현재까지는 친문 그룹에서 출마 의사가 확고한 인사는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다. 21대에서 4선이 돼 원내대표에 재도전하는 김태년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등을 맡으며 얻은 경험과 관록을 강조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3선의 전해철 의원은 협상력 등 협치 리더십을 내세워 물밑 캠페인에 돌입했다.

역시 친문인 사무총장 윤호중 의원도 원내대표 도전을 고려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윤 의원이 같은 '이해찬계'인 김태년 의원과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비문계에서는 4선이 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5선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 4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3선 중에는 당내 연구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박완주·박홍근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진행될 국회의장 후보 선거,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고려하면 계파간 셈법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후보에는 21대 국회 최다선인 6선 박병석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점쳐진다. 5선의 김진표 의원과 이상민 의원도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김진표 의원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친문 그룹의 지지를 받은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전당대회의 경우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친문 홍영표 의원과 비문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김부겸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지역구만 68명에 이르는 초선들의 '입김'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전자들은 초선들의 마음잡기에 부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초선 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친문 그룹이 상당한 규모라 친문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분석도 벌써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앞에 겸손하라" 이해찬의 당부

민주 당선인들에 편지…"열린우리당, 자만으로 나락"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국민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친전에서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보다 당과 정부, 국가와 국민의 뜻을 먼저 고려해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던 때를 돌이키며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며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 소임이었던 21대 총선 성과를 뒤로하고, 28년간 봉직한 의원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간다. '민주정부 4기'를 창출할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에게 있다"며 "공인으로서 이 막중한 책임을 항상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통합당 비대위, 다시 김종인 카드

심재철 소속 의원에 설문…김종인 "전권 주면 수락"

미래통합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하기로 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는 이날 "현역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 142명 중 14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전날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할지, 현행 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통합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견 취합 결과를 추인했다. 심 권한대행은 "김종인 비대위 의견이 다수였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헌·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이 주어지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당대회를 7월, 8월에 하겠다는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8월 전대, 또는 그보다 앞당긴 조기 전대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라면 맡지 않겠다는 의미다. /오광록 기자 kroh@

선관위 "투·개표 조작, 있을 수 없어"

허위사실 유포 강경대응…요청 시 자료 모두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 대해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투·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자는 입장을 엄중히 전한다"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일부 유튜브를 통해 제기되는 사전투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인천·경기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대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선 "양당 외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근거 없이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런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